

꿀벌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

기고

윤한주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산과 들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각종 꽃이 지천에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겨우내 자취를 감추었던 동물들도 하나둘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몇 년 동안 겨울나기가 유난히 힘든 곤충이 있다. 바로 꿀벌이다. 겨울이 한번 지날 때마다 꿀벌의 집단폐사(실종)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으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양봉농가와 꿀벌의 수분(受粉)이 필요한 식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0일은 2017년 국제연합(UN)이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정한 '세계 벌의 날'이다.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꿀벌은 농가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 대부분 꽃은 꿀벌 같은 곤충을 통해 수분하며 이를 통해 씨앗을 만들고 자손을 번식시킨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농작물 중 71%의 수분 작용을 꿀벌이 돕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농작물이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고 있기에,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 농작물 수확량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다. 이처럼 꿀벌은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꿀벌의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엷박자 현상을 들 수 있다. 생태 엷박자 현상은 기후환경이 변하는 속도를 동식물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온도에 민감한 벌은 동물이 꿀벌 역시 따뜻한 날씨가 꿀을 채집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둘째, 꿀벌의 먹이인 밀원(蜜源) 부족이다. 밀원식물은 벌에게 꽃가루를 많이 제공하는 꽃과 나무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카시나무가 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카시나무 개체 수 감소와 아카시꽃이 피는 4, 5월을 제외하면 영양분이 부족한 설탕물에 의존하게 되어 면역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꿀벌 기생충인 응애의 확산이다. 꿀벌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며 체액을 빨아 먹는 진드기로 피해를 입은 꿀벌 집단은 체중과 수명이 줄어 집단폐사로 이어진다. 마지막 이유는 농가에서 뿌리는 농약이다. 특히 요즘은 농약을 드론으로 살포하여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므로 유해 곤충뿐 아니라 꿀벌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꿀벌이 사라지면 작물의 생산량이 줄어 식량난과 영양부족으로 한 해 140만 명이상이 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꿀벌 집단폐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꿀벌실종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다. 사실 기후변화는 꿀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계적인 기후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꿀벌과 관련해서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밀원식물 면적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을 들 수 있다. 아카시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꽃나무를 심어 꽃 꿀과 화분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장기 계획이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바이러스와 응애에 강한 꿀벌을 만들어내는 시도가 진행 중이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응애 방제의 최적 시기를 알아내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또한 꿀벌은 벌통 내의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에 벌통 안에 센서를 부착하여 최적의 생존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살충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드론 방제 금지 또는 드론을 이용하더라도 꿀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생물학적 방제, 서식지 다양화 등으로 살충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꿀벌실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꿀벌의 보호를 더 미루다가는 인류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꿀벌과 관련된 학자, 사회단체, 산업종사자,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어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약탈범죄’ 외면하는 안일한 윤석열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거부권(재요구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없었다는 게 이유지만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인색한 정부와 여당의 안일한 대처가 안타깝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해도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서민이 조성한 주택도시보증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까다로운 요건으로 제정에 다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돼도 은행 등에서 긴급 저리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전세사기 증가에 따라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나왔다.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개정은 절망의 벽 안에 갇힌 피해자들에게 숨 쉴 구멍’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세사기를 ‘약탈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지난 해 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날린 한 피해자는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현행법으로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정부마저 그들의 사기를 부추기는 것일까. 전 재산을 날린 애꿎은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 자영업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다

내수진작 등 특단 대책 내놔야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무더기 파산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파산이다. 정부와 국회, 지역 자치단체까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당장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신해 은행에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43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70% 늘어났다. 전남신보의 지난해 대위변제액도 412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무려 279억 원(209.77%)이나 치솟았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 등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광주가 3171건에 372억 원, 전남은 3182건에 359억 원으로 나타났

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2007년 이후 광주와 전남 모두 역대 최대치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문제는 자영업의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었다. 건설 수주액 또한 지난해 1분기보다 광주 69.8%, 전남 22.9%씩 감소했다. 여기에 소비 동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광주는 3.3%, 전남은 5.3% 각각 줄었다. 공급과잉의 현실에서 복합적 경제여건마저 지금처럼 악화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

지역 자영업자는 지역을 지탱하는 지역경제의 핵심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은 내수를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자 지원 강화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내놔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영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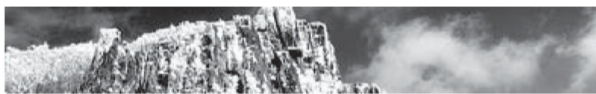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서석대



광주 동구 끝자락인 소태동에 자리를 잡은 ‘왕실의 태가 묻힌 곳’이라는 태봉(胎封)마을은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곳이었다. 약 100가구 규모의 주민들이 무등산 자락을 등에 업고 자연과 어울려 살아오고 있었다. 허나 조용하면서 평화로웠던 이 마을은 그러나 어느해 어느 봄을 기점으로 조용함 부터 더욱 무겁고 깊은 침묵 속으로 40여년간 잠겨 버렸다.

그때가 1980년 5월 봄이었다. 공수부대가 고향 언저리에 도착했고, 뒤이어 광주시내를 점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누구네 집 사촌이 죽었다’, ‘어린 남자가 총을 맞았다’, ‘산달 앞둔 임신부가 계엄군에 의해 죽었다’ 흥흥하고도 무서운 이 야기가 빠르게 마을 주민 속으로 퍼졌다.

그러다가 누군가 말했다. “계엄군이 우리 마을도 온다여!” 주민들의 선택은 뜬금없게도 맞서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계엄군은 ‘군인’이 아니라 ‘학살자’였기 때문이다. 마을에 들어와 모두를 죽일수도 있다는 공포감과 아는 이들이 총탄에 쓰러진 분노가 겹쳐졌다. 주민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일부는 광주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나주와 화순으로 움직였고, 나머지는 파출소 등지에서 무기를 획득했다. 살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대명제였다.

이때 계엄군은 광주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화순 능주와 광주 동구 주남마을로 퇴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주에는 아직 조선대학교 뒷산을 타고 태봉산으로 넘어와 진지를 구축한 7·11공수여단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시민들은 돌아올 계엄군을 대비해 방어진을 만들었다. 가장 먼저 자리가 잡힌 곳이 바로 태봉마을 ‘배고픈 다리

(홍림교)’였다. 당시 광주의 ‘시민지역방위군’은 지원동을 비롯해 △백운동 △화정동 △서방삼거리 △산수동 등지에 결성됐다.

그리고 운명의 80년 5월22일. 조선대 뒤 깃대봉에서 배고픈다리 쪽으로 내려오던 계엄군과 시민군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시민군의 저항에 이반에도 계엄군은 물러났다. 시민군은 낙오된 계엄군을 생포, 전남도청으로 이송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태봉마을 주민들은 김밥과 주먹밥·박카스·담배 등을 마련해 함께했다. 승리의 기쁨과 불안 속에서 시민군들은 23일 시민수습대책위원회의 총

회수 결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악몽은 이후부터였다. 27일 도청이 진압되고, 계엄군의 세상이 됐다. 경찰을 앞세운 계엄군은 마을 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숨겨진 총을 내놓고 가담자를 말하라’며 가혹한 고문을 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마을 주민 몇몇이 그저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이름을 토해듯 내뱉었다. 그러자 이름이 불린 이들은 개처럼 끌려가 죽을만큼 고문을 당했다. 그 지옥은 11월까지 이어졌다. 평화로웠던 마을은 순식간에 피폐해졌고, 서로를 믿지 못했으며 언제 끌려갈지 몰라 불안에 떨었다. 결국 하나 둘 집을 버린채 도망치듯 떠났고 쇠락해진 모습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거대한 권력에 감히 대항한 것? 서울의 봄을 만들고 광주의 봄까지 만들려고 내려온 이들을 두팔 벌려 환영하지 않은 것?

4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곳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요?”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